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수신처	각 언론사
배포일	2026년 1월 31일	담당	집행부
작성자	이 한 결	전화	010-5658-8727
		문의	hgl0510@naver.com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정신병원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가도 인지조차 못하는 사회”

-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대위출범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한 울산시와 울주군은 각성하라”**
- **잇따른 울산 반구대병원 내 사망**
- **민관합동 긴급 울산 반구대병원 탈원화 지원팀, 울산시에 촉구**
-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대위, 울산경찰청에 반구대병원 고발**

잇따른 울산 반구대병원 내 사망, 유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 돼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정신장애인 및 인권단체 등은 울산시청 앞에서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서 운영 중인 반구대병원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조사와 피해자 배·보상 등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며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했다.

신석철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반복되는 반구대병원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도 공범“이라 꼬집으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공대위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이한결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2022년 1월 반구대병원에서 사망한 김씨(사망 당시 32세)의 유족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유족은 ”고인이 2011년 7월 27일, 반구대병원에 입원하여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살아왔다. 가족에게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었고 ‘안전해야 할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 믿음이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라고 밝히며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단 한명의 관리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폐쇄병동이었고, 보호와 감독이 전제된 공간이었음에도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답답함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울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몸부림 앞에서 병원은 철저히 침묵했다.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의 관리 부실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은 유족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라고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이어서 유족은 해당 사망사건을 "개인 간의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병원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설명하며 "진실이 외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출범식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방정신보건연구회 배진영 회장은 "그동안 정신병원은 우리를 비정상이라고 칭하고, 그러니 정상으로 만들어주겠다며 가두고, 약물을 먹이고 주사해왔다. 그런데 묻고 싶다. 과연 누가 비정상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서 배 회장은 "반구대정신병원이라는 비정상적인 공간에서는 고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도 허용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포기된 채, 그 상황 속에 놓였을 고인이 안타깝다. 경찰을 부를 수도, 의료진들이 있었음에도 소리를 쳐 도움을 받을 수도, 도망을 쳐볼 수도,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도 없었던 고인이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고인이 놓였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배 회장은 "병원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가두고, 폭력을 방관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저런 곳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우리 당사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며 울산시청과 울산경찰청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전했다.

관계 공무원,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합동조사 예고

한편, 공대위는 대표단은 울산시청 시민건강과 과장과 울주군 보건소 정신보건팀장 등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를 발표한 이한결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기 이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인권침해 및 사망사건에 대해 질타하는 공대위 집행부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라고 무책임한 관계 공무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관계 공무원이 관련 법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히려 공대위에서 법률 조항을 짚어주며 해당 법률의 검토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다. 그 과정에서 법률조차 모르는데 현장점검에서 무엇을 보고 왔을지 짐작되어 참담한 심정이 든다. 공대위가 사전에 요청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면담이 진행된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행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조사 예정만을 예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2026년 2월 13일까지 입장을 보낼 것을 재차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대위는 ▶정신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 ▶울산 반구대정신병원 탈원화 전담팀(TF) 구성 ▶즉각적인 현장점검 및 수용자에 대한 탈원화 지원 ▶특별감사 및 합동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공대위와의 면담 요청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전에 울산시에 발송하고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울산경찰청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후 공대위는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구대병원장, 당시 고인의 주치의와 담당 간호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 소속의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피해자는 병동 복도와 병실에서 발로 차이고, 끌려가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은 CCTV에 연속적으로 포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폭행을 제지하거나 중재하는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환자를 분리하거나 보호하는 조치도 없었다. 당일 병동을 담당했던 간호사는 다른 환자의 연락을 받고 가서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외부 병원 이송도 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조 변호사는 반구대병원 사건을 개인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병원이 너무 끔찍해서 이곳에서 나오고 싶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이 병원이 단순히 관리가 미흡한 공간이 아니라 환자들조차 견디기 어려운 비인간적 환경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병원의 기본적 기능마저 상실한 점을 비판하며 “고인은 무려 10년 동안 반구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거의 박탈당한 채, 사실상 병원이라는 공간에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있었다. 이 병원은 환자를 회복시키는 공간이 아니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되었다. 고인은 병원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죽었다. 그럼에도 병원의 책임은 단 한 번도 형사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울진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울진경찰서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수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의료진을 직접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병원의 구조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병원장은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구축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마련·감독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직의사는 응급처치를 시행하거나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화상 지시에 그치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인은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담당 간호사도 폭행이 반복되는 정황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의사의 직접 대면 평가 없이 사실상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 상태로 단정하는 판단을 전제로 응급조치와 이송을 지연시켰다”라고 밝히며 반구대병원 의료진의 법률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며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에서도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온 이한결 공대위 공동위원장도 “과거 정신병원 내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이유로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우리의 살려달라는 외침은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하며 부정하였다. 그 결과 연달아 정신보건 시스템에 의한 살인과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수많은 국가폭력이 춘천 정신병원, 부천 정신병원 등 정신병원 내 사망사건이며 울산 반구대병원도 그중 하나”라고 전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병원의 책임을 밝히고 정신건강 정책을 당사자가 주도하여 개혁하는 길이야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던 유족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공대위 관계자는 “부천 정신병원 사망사건 이후 2024년 보건복지부가 격리 및 강박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지침 위반이 대거 확인됐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보아 위반을 봐주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 회복은 어렵다”라고 밝히며 “공대위 차원에서 반구대병원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반구대병원의 피해자와 유족, 공익 제보자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 치료기능을 상실한 현대판 아우슈비츠를 폐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및 울산 반구대병원에 관련한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공익 제보는 cowalk1004@daum.net, 070-8666-4055로 연락하면 된다.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 제보 포스터]

